

수입선다변화제도 해제와 향후 정책방향

<본회 통상협력과>

1. 수입선다변화제도의 배경

1978년부터 시행되어 온 수입선다변화제도가 올해 6월말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원래 1999년 말로 예정되었던 해제시기가 6개월 앞당겨진 것은 IMF와의 약속에 의한 것이다. 수입선다변화제도는 유치산업보호 측면에서 초기단계의 산업을 장래의 일정 시점까지 외국의 수입품으로부터 보호육성하고,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을 억제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근거로 도입되었다.

따라서 동제도는 대일무역적자의 개선, 산업의 자생력 확보, 우리 경제의 자급도향상 및 대상산업이 수출산업화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WTO의 출범으로 대표되는 무역자유화의 흐름속에서 특정국가에 대한 차별적 수입수량

제한을 내용으로 한 동제도의 전면 철거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국내적으로도 수입가격 상승으로 중간재의 경우 생산비부담의 증가와 최종재의 경우 소비자후생이 감소하는 등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일본 이외의 제3국으로부터의 우회수입 등이 증가하여 다변화제도 자체의 유효성이 반감하게 되었다.

2. 우리 나라의 수입정책과 수입선다변화제도

1978년 이전 우리나라의 수입정책은 기본적으로 만성적인 무역수지적자를 억제하고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의 추진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가급적 수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취해왔다.(1977년 초까지 수입자유화율은 53.8%에 불과)

1980년대 이후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수입정책도 개방을 통한 경쟁력강화와 통상마찰해소

에 주안점을 두고 전기전자제품을 비롯한 공산품의 본격적인 수입자유화조치가 단행되었다. (1978~79년 3차례의 대폭적인 수입자유화조치와 1980년대초 일련의 수입자유화조치로 수입자유화율은 1983년 말 80% 상회, 1984년 이후 수입자유화예시계획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등 공산품에 대한 본격적인 자유화가 단행되어 1988년 수입자유화율은 94.8%로 높아지고 공산품의 경우에는 99%까지 높아짐))

1990년대 들어서는 전면적인 수입자유화와 함께 국제규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보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원산지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반덤핑제도 등 산업피해구제제도가 국제규범에 맞도록 정비되었다.

특히, 농산물에 대한 수입자유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UR협상 타결직후 94년 4월 발표된 2단계 수입자유화계획을 통해 97년까지 8개 품목을 제외한 전품목이 자유화되었다.

대일 무역수지 추이(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 1970 | 1975 | 1977 | 1980 | 1985 | 1990 | 1995 | 1997 |
|-----------|--------|--------|--------|--------|--------|--------|---------|---------|
| 총무역수지(A) | -1,147 | -2,193 | -765 | -4,787 | -853 | -4,828 | -10,061 | -8,452 |
| 대일무역수지(B) | -577 | -1,141 | -1,779 | -2,819 | -3,016 | -5,936 | -15,557 | -13,375 |
| B/A(%) | 50.2 | 52.0 | 232.6 | 58.9 | 353.6 | 122.9 | 154.6 | 158.2 |

산업별 명목수입자유화율 추이(단위 : %)

| 구 분 | 1982 | 1985 | 1986 | 1987 | 1988 | 1990 | 1992 | 1994 |
|--------|------|------|------|------|-------|-------|-------|-------|
| 전 체 | 76.6 | 87.7 | 91.5 | 93.6 | 94.8 | 96.3 | 97.7 | 98.6 |
| 전자, 전기 | 46.1 | 73.9 | 87.0 | 96.6 | 100.0 | 100.0 | 100.0 | 100.0 |

수입선다변화 지정 품목수

| 연 도 | 수입선다변화 지정 품목수 | | |
|------|---------------|----------|---------|
| | CCCN 4단위 | CCCN 8단위 | HS 10단위 |
| 1980 | 195 | | |
| 1982 | 209 | 913 | |
| 1984 | | 590 | |
| 1986 | | 414 | |
| 1988 | | | 344 |
| 1990 | | | 268 |
| 1991 | | | 258 |
| 1992 | | | 258 |
| 1993 | | | 258 |
| 1994 | | | 230 |
| 1995 | | | 204 |
| 1996 | | | 162 |
| 1997 | | | 127 |
| 1998 | | | 88 |
| 1999 | | | 16 |

주 : 1990년 1월 1일 HS코드의 개정으로 인한 품목세분화로 1990년 HS 품목수의 증가가 발생함.

수입자유화 확대에 대한 보완조치로 수입자유화 이후 대일 수입 급증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수입선다변화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80년대 이후 수입자유화율의 상승과 함께 수입선다변화 지정품

목수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왔다. 이어 1994년부터는 UR 타결을 계기로 대상품목수를 꾸준히 줄여왔으며, 1997년말 IMF와의 자금지원협상과정에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자금지원을 약

속하는 대신 우리 정부는 동제도를 1999년 상반기까지 폐지하기로 약속하였다. (현재 승용차, 굴삭기, 머시닝센터, 대형 칼라 TV, VCR, 핸드폰 등 16개 품목이 남아 있음)

3. 수입선다변화제도 해제의 예상영향과 대응

일부에서는 수입선다변화품목해제로 국내산업이 받을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외환위기의 영향 등으로 국내경기가 위축되어 대일수입이 당장 급격하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에 비해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해제품목 관련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동차, 공장기계, 캠코더 등 핵심품목의 신기술개발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원가절감과 생산성향상을 위해 자동차, 굴삭기 등 14개 품목의 부품공용화, 표준화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자본재산업의 육성, 중소기업지원, 기술개발촉진시책과 연계해 국산화율을 크게 높인다는 전략이다.

또한, 이를 계기로 일본에 대해

서도 혁제신발 및 가공피혁에 대한 관세쿼터제와 같은 수입규제적 조치를 철폐해 줄것을 일본정부에 요구키로 하였다.

이와 함께 일본기업들의 반덤핑공세 등으로 국내업체의 피해가 클 경우 산업피해구제제도를 활용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는 자동차와 가전 산업이다.

KIET에 따르면 일본산 자동차의 국내시장점유율은 2000년 3%(45,000대)에서 2005년 9.9%(144,000대)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96년 말 12%인 수입차의 시장점유율도 2005년에는 12.9%로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 중소기업계는 비상상태이며, 도자기, 시계업계는 일본제품의 저가공세를 우려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이제 일본제품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막을 잃어버림에 따라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밖에 없게 되었다.

4. 현시점에서 수입선다변화제도 해제의 필요성

특정산업의 장기간 보호에 따른 불공정 관행, 소비자후생의 감소 등의 부작용이 있으며, 유

망산업에 대한 투자증대를 통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경쟁 촉진, 국내자본시장의 육성 및 외국인직접투자유치정책 등 보호보다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육성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있다.

여기에 자동차, 조선, 전자 등 주요 수입선다변화 대상품목에 대한 우리나라의 생산규모가 세계수준으로 확대되고 시장지배력이 커진 상황에서 지속적인 보호는 통상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

또, 비차별적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고 있는 WTO체제하에서 특정국가로부터의 수입을 규제하는 동제도는 존립 명분을 찾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동제도하의 보호조치로 국민경제 전체의 후생이 감소하고,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증가에 따른 제3국으로부터의 우회수입 및 예외수입의 증가 등으로 동제도의 유효성이 반감되었다.

5. 수입선다변화제도 해제의 후생분석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실시로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왜곡에 의한 비효율성으로 국민경제의 후생이 감소하나, 유치산업에 대한 보호효과로 유치산업이 성장, 발전할 경우 그 결과 수입선다변화제도 해제 이후 국민경제의 후생은 증가할 수 있다.

동제도의 시행으로 단기적으로

는 후생감소가 일어나나 동제도의 시행기간동안 생산성향상이나 기술개발 등을 통한 공급능력향상이 충분히 일어난 후 동제도의 해제는 자유무역의 경우보다 후생의 증대를 가져올 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6.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운용성과

· 대일수입억제 및 수입선전환

1988년 이후 수입선다변화 대상품목의 총수입과 대일수입의 증가율을 비교하여 보면, 전반적으로 다변화품목의 수입증가율은 전체수입증가율보다 낮으며, 특히 대일수입증가율은 총수입증가율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 수입선다변화제도가 대일수입을 크게 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개별품목에 대한 효과는 국내경기요인이나 해당품목의 대일 수입상대가격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개별품목에 대한 대일수입수요함수를 추정한 결과 수입선다변화로 인해 대일수입이 감소한 품목은 전체 대상품목의 47%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어 동제도가 전체적으로 대일수입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나, 상당수의 품목에 대해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총수입에

<수입선다변화 품목의 용도별 구성비(%)>

| 구 분 | 1981 | 1985 | 1987 | 1990 | 1993 |
|-----|------|------|------|------|------|
| 원자재 | 70.6 | 62.9 | 54.1 | 35.9 | 21.7 |
| 자본재 | 17.3 | 22.6 | 31.2 | 47.4 | 48.8 |
| 소비재 | 12.1 | 14.5 | 14.7 | 16.7 | 29.5 |

<수입선다변화 품목의 대일수입 추이(백만달러, %)>

| 구 분 | 1988 | 1990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
| 총수입 | 51,811 | 69,844 | 81,775 | 83,800 | 102,384 | 135,119 | 150,339 | 144,616 |
| 수입선다변화 품목 | | | | | | | | |
| 총수입 | 3,654 | 6,242 | 6,523 | 5,262 | 6,696 | 7,048 | 5,616 | 2,809 |
| 대일수입비중 | 532 | 45.1 | 40.7 | 38.0 | 37.0 | 35.6 | 27.1 | 28.3 |

<수입선다변화 품목의 대일수입비중 추이(%)>

| 구 분 | 1988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
| 전제품 | 53.2 | 46.8 | 45.1 | 46.2 | 40.7 | 38.0 | 37.0 | 35.6 | 7.1 | 28.3 |
| 전기전자 | 64.4 | 68.6 | 64.6 | 58.5 | 47.0 | 35.0 | 32.7 | 28.4 | 17.6 | 15.2 |

<수입선다변화 지정기간중 국산화율과 자급도 변화별 품목수>

| 구 분 | 국산화율 | 자급도 |
|-----|-----------|-----------|
| 상 승 | 37(63.8%) | 36(50.7%) |
| 불 변 | 5(8.6%) | 7(9.9%) |
| 하 락 | 16(27.6%) | 28(39.4%) |
| 합 계 | 58(100%) | 71(100%) |

주 : 1993년 이후 1998년 6월까지 수입선다변화제도가 해제된 98개 품목을 대상 지정기간 동안의 변화를 나타냄
() 안의 숫자는 구성비이며, 불변은 변동이 1% 미만인 경우임

<수입선다변화 지정기간중 국산화율과 자급도 변화별 품목수(미해제 품목)>

| 구 분 | 국산화율 | 자급도 |
|-----|-----------|-----------|
| 상 승 | 20(83.3%) | 16(57.1%) |
| 불 변 | 0(0.0%) | 3(10.7%) |
| 하 락 | 4(16.7%) | 9(32.2%) |
| 합 계 | 24(100%) | 28(100%) |

주 : 1999년 6월말 수입선다변화제도가 해제될 예정인 48개 품목(1998년말 해제품목 32개포함)을 대상으로 지정 이후 1997년까지 변화를 나타냄.
() 안의 숫자는 구성비이며, 불변은 변동이 1% 미만인 경우임

서 대일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8년 53.2%에서 1997년 28.3%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 동제도로 인해 일본에서 다른 국가로 수입선전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품목별로 살펴보면 기계류나 정밀기기의 경우에는 동제도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대일수입비중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 국산화와 자급도

1993년에서 1998년 6월까지 수입선다변화제도가 해제된 98개 품목들중 통계과목이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제도 시행기간중 국산화율이 상승한 품목은 37개 품목(63.8%)이며, 16개 품목은 국산화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5개 품목은 1%미만 변화 : 불변) 자급도는 36개 품목(50.7%)이 상승, 28개 품목(39.4%)은 하락, 및 7개 품목은 불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산화율과 자급도가 모두 상승한 품목은 통계입수가 가능한 전체 45개 품목의 51.1%인 23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1999년 6월말 수입선다변화제도가 해제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48개 품목(1998년 12월말 해제된 32개 품목 포함)들중 통계과목이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의 지정이후 1997년까지 국산화율과 자급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수입선다변화 해제 이후 주요 전기전자제품의 국산화를 및 자급도의 변화(>

| 품 명 | 해제연월 | 해제 전년도 | | 최근년도(1997년) | |
|-----------------------------|------|--------|-----|-------------|-----|
| | | 국산화율 | 자급도 | 국산화율 | 자급도 |
| 휴대용 디지털 음성재생기(8519912020) | 93.2 | - | 64 | 35 | 60 |
| 레이저 디지털 라디오 수신기(8527311310) | 93.2 | 20 | 87 | 52 | 80 |
| 디지털식 레코드 플레이어(8519210000) | 94.1 | 23 | 58 | - | 56 |
| 레이저 디지털 라디오 수신기(8527213000) | 94.1 | 51 | 77 | - | 63 |
| 비디오 튜너(8528104000) | 94.1 | - | 94 | - | 100 |
| 워드프로세싱 머신(8469100000) | 95.1 | 43 | 50 | - | - |
| 프린터(8471922010) | 96.1 | 66 | 56 | 55 | 57 |

주 : ()안의 숫자는 HS 코드번호임

국산화율이 상승한 품목은 20개 하락한 품목은 4개, 자급도가 상승한 품목은 16개 하락한 품목은 9개 품목이다.

국산화율과 자급도가 모두 상승한 품목은 9개 품목(전체의 47.4%)으로 동제도에서 이미 해제된 품목들에서의 비중 51.1%와 근사한 수치로 동제도가 약 절반 정도의 품목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할 수 있다.

· 교역

1993년 이후 1997년까지 동제도로부터 해제된 품목들의 대일수입비중이 해제 당해년도에 증가한 품목이 43.3%로 높지 않게 나타났으나(감소한 품목이 44.0%), 이후 대일수입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는 철강 및 비금속, 전기전자, 기계류, 잡제품 등에서 대일수입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섬유류의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변화 해제전후 무역특화지수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해제 직후 무역특화지수가 악화되었으나 장기적으로 무역특화지수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의 대일수입비중 변화 (해당품목수의 비중%)>

| 구 분 | 대일수입비중 | 해제년도 | 해제1년후 | 해제2년후 | 해제3년후 |
|------|--------|------|-------|-------|-------|
| 전 체 | 증 가 | 43.3 | 52.9 | 52.4 | 57.3 |
| | 불 변 | 12.8 | 8.0 | 6.7 | 6.7 |
| | 감 소 | 44.0 | 39.1 | 41.0 | 36.0 |
| 전기전자 | 증 가 | 45.0 | 52.6 | 60.0 | 70.0 |
| | 불 변 | 5.0 | 10.5 | 0.0 | 0.0 |
| | 감 소 | 50.0 | 36.8 | 40.0 | 30.0 |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의 무역특화지수 변화>

| 구 분 | 해제2년전 | 해제1년전 | 해제년도 | 해제1년후 | 해제2년후 | 해제3년후 |
|------|--------|--------|--------|--------|--------|--------|
| 전 체 | -0.197 | -0.162 | -0.193 | -0.174 | -0.101 | -0.083 |
| 전기전자 | 0.233 | 0.159 | 0.067 | 0.080 | 0.215 | 0.172 |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의 무역특화지수 변화(해당품목수의 비중%)>

| 구 분 | 무역특화지수 | 해제년도 | 해제1년후 | 해제2년후 | 해제3년후 |
|------|--------|------|-------|-------|-------|
| 전 체 | 개 선 | 46.1 | 49.3 | 56.5 | 53.9 |
| | 불 변 | 7.8 | 7.9 | 3.7 | 5.3 |
| | 악 화 | 46.1 | 42.9 | 39.8 | 40.8 |
| 전기전자 | 개 선 | 40.0 | 31.6 | 31.3 | 30.0 |
| | 불 변 | 10.0 | 10.5 | 6.3 | 0.0 |
| | 악 화 | 50.0 | 57.9 | 62.5 | 70.0 |

7. 수입선다변화 예시품목의 현황과 예상되는 영향

다변화예시품목의 84.5%에 해당하는 품목들이 70% 이상의 자급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전

체 품목의 약 절반 정도는 90% 이상의 높은 자급도를 보이고 있다.

국산화율도 전체 품목의 82.5%가 70% 이상의 국산화율을 보이고 있으며, 국산화율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품목은 7.3%에 불과하다.

이는 수입선다변화제도가 국산화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일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99년 6월말까지는 자동차, 칼라TV, VCR, 카메라, 복사기 등 국내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들을 포함하여 수입선다변화제도가 전면 해제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영향은 과거 일부 수입선다변화 품목의 해제의 경우에 비해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입선다변화의 해제로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특히 전체품목의 20% 정도는 수입이 4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및 전기전자 부문에서 수입급증이 예상되는 품목이 많았다(특히 전기발송, 무선전화기, 팩시밀리 등)

수입선다변화의 해제로 대일수입이 증가하더라도 생산을 대체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생산감소가 예상되는 품목은 전체의 20%정도로 수입선다변화의 해제로 국내 관련품목의 생산기반이 붕괴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입선다변화 해제예시품목의 자급도, 국산화율 및 수출비중>

| 구분 | 자급도 | | 국산화율 | | 수출비중 | |
|--------|-----|------|------|------|------|------|
| | 품목수 | 구성비 | 품목수 | 구성비 | 품목수 | 구성비 |
| 0~10% | 0 | 0 | 0 | 0 | 30 | 27.0 |
| 10~20% | 0 | 0 | 0 | 0 | 14 | 12.6 |
| 20~30% | 3 | 2.9 | 1 | 0.9 | 14 | 12.6 |
| 30~40% | 0 | 0 | 0 | 0 | 12 | 10.8 |
| 40~50% | 2 | 1.9 | 7 | 6.4 | 16 | 14.4 |
| 50~60% | 7 | 6.8 | 7 | 6.4 | 12 | 10.8 |
| 60~70% | 4 | 3.9 | 4 | 3.7 | 2 | 1.8 |
| 70~80% | 18 | 17.5 | 19 | 17.4 | 6 | 5.4 |
| 80~90% | 22 | 21.4 | 28 | 25.7 | 2 | 1.8 |
| 90% 이상 | 47 | 45.6 | 43 | 39.4 | 3 | 2.7 |

<수입선다변화 해제예시품목의 해제 이후 수입변화율 전망>

| 구분 | 전체 | | 전기전자 | |
|---------|-----|------|------|------|
| | 품목수 | 구성비 | 품목수 | 구성비 |
| -20% 이하 | 7 | 6.9 | 3 | 16.7 |
| -20%~0% | 14 | 13.9 | 2 | 11.1 |
| 0~10% | 25 | 24.8 | 1 | 5.6 |
| 10~20% | 19 | 18.8 | 2 | 11.1 |
| 20~40% | 15 | 14.9 | 2 | 11.1 |
| 40% 이상 | 21 | 20.8 | 8 | 44.4 |

<수입선다변화 해제예시품목의 해제 이후 국산화율 전망>

| 구분 | 전체 | | 전기전자 | |
|---------|-----|------|------|------|
| | 품목수 | 구성비 | 품목수 | 구성비 |
| 2%이상 하락 | 8 | 7.3 | 1 | 5.0 |
| 0~2% 하락 | 3 | 2.8 | 0 | 0.0 |
| 불변 | 38 | 34.9 | 7 | 35.0 |
| 0~1% 상승 | 31 | 28.4 | 2 | 10.0 |
| 1~2% 상승 | 10 | 9.2 | 2 | 10.0 |
| 2%이상 상승 | 19 | 17.4 | 8 | 40.0 |

<수입선다변화 해제예시품목의 해제 이후 자급도 전망>

| 구 분 | 전체 | | 전기전자 | |
|---------|-----|------|------|------|
| | 품목수 | 구성비 | 품목수 | 구성비 |
| 2%이상 하락 | 19 | 18.8 | 7 | 36.8 |
| 1~2% 하락 | 11 | 10.9 | 0 | 0.0 |
| 0~1% 하락 | 24 | 23.8 | 2 | 10.5 |
| 0~1% 상승 | 34 | 33.7 | 7 | 36.8 |
| 1~2% 상승 | 4 | 4.0 | 2 | 10.5 |
| 2%이상 상승 | 9 | 8.9 | 1 | 5.3 |

<수입선다변화 해제예시품목의 해제 이후 무역특화지수 전망>

| 구 분 | 전체 | | 전기전자 | |
|-------|-----|------|------|------|
| | 품목수 | 구성비 | 품목수 | 구성비 |
| 크게 악화 | 19 | 18.0 | 6 | 30.0 |
| 다소 악화 | 11 | 20.7 | 5 | 25.0 |
| 불 변 | 24 | 33.3 | 6 | 30.0 |
| 다소 개선 | 34 | 18.9 | 2 | 10.0 |
| 크게 개선 | 4 | 9.0 | 1 | 5.0 |

수입침투율(수입/내수)은 다변화해제 이후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전체 품목의 64% 정도의 품목에서 수입선다변화 해제 이후 수입이 국내생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수입선다변화 해제 이후 국산화율은 전체 품목의 55%에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34.8%의 품목에서 불변, 10%의 품목에서 하락) 국산화제고 노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품목의 57%에서 수입선다변화 해제 이후 자급도(생산/(수출+내수) : 총수요에서 국산제품의 비중)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 반면, 30% 정도는

자급도가 하락, 13% 정도에서 자급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8. 종합평가

수입선다변화 해제로 인하여 수입선다변화품목 전체적으로 자급도는 해제전 평균 83.4%에서 해제 후 82.5%로 하락할 것이나, 국산화율은 기업들의 국산화 노력이 지속되어 해제전 81.2%에서 81.7%로 오히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동제도의 해제가 전체적으로는 당초의 우려했던 것처럼 국내 관련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또한, 교역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수입침투율이 해제전 23.4%에서 해제 후 24.9%로 증가하여 대일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시장잠식이 예상되며 특히, 전기전자 및 요업제품 등에서 시장잠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선다변화 해제 후 대일제품의 수입이 증가할 것이나, 총수출이 더욱 높은 증가율을 보여 대외교역면에서 동제도 해제의 영향은 전체적으로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전체의 수출비중은 해제전 32.0%에서 해제 후 34.2%로 오히려 상승하고 무역특화지수도 0.151에서 0.163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해제가 국내산업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실제로는 과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1993년 이후 수입선다변화 품목이 점진적으로 해제되었으나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해제이후 국내산업기반이 급속히 붕괴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품목은 경쟁촉진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9. 수입선다변화제도 해제 이후의 정책방향

지난 20여년간 국내산업보호와 대일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운용

되어 온 수입선다변화제도가 폐지될 경우 소비자잉여의 증대와 경쟁여건의 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단기적으로 우려되는 대일수입증가에 따른 무역불균형의 심화와 국내산업의 시장기반 약화에 대응한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 **긴급수입제한조치의 활용**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로 인한 대일수입 급증으로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후적인 산업피해구제수단으로써 공산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의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일본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시장점유율의 확대를 위해 덤핑수출을 할 경우 시장방어를 위해 반덤핑상계관세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수입선다변화제도 해제시 상대적으로 큰 타격이 우려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WTO의 보조금협정에 위배되지 않고 무역왜곡효과가 적으므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 **경쟁정책**

수입선다변화제도가 완전 폐지되는 경우 국내산업은 외국기업들과 직접 경쟁하면서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 기업 스스로 외국과의 경쟁을 통하여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 자원을 집중 시키는 것이 기업이나 국민경제에 모두 바람직할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들의 자원재배분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법규나 제도를 정비하는 등 보조적인(지원적인) 정책을 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기업 스스로는 경쟁과 국내외 기업간 제휴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를 비롯한 중화학공업의 경우에는 적정생산규모를 유지하고 효율적인 경쟁체제를 유지하도록 국내 대기업들간 사업조정을 하고, 기초 및 잡제품 등 중소기업형 제품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간 제휴 또는 합병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에 의한 이익을 추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시장기능에 의한 무역균형 추구**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해제로 대일무역적자의 심화가 우려

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시장기능에 의한 대일수입 억제장치의 강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업계 자율적으로 수입선을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일본 이외 국가의 제품에 대한 상대적인 정보부족 해소 등)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일본제품의 수입에 있어서 수입업자간 지나친 경쟁을 막기 위해 가격, 수량, 품질 및 기타 거래에 관한 수입업자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기계류와 부품 등과 같이 대일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자 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내기업간 공동개발 등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일수입억제를 위한 정책으로써 관세와 보조금의 효과를 동시에 지닌 환율정책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대일수입 억제라는 방어적인 자세보다는 무역자유화의 추세에 순응하면서 대일무역적자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일수출 확대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